



의안번호

제119호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9. 11.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19호
----------	-------

제출연월일 : 2019. 9. 1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개정이유(배경·필요성)

- 현재 시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민간업체 처리비용 대비 약 28%대로 저렴하여 반입수수료를 인상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로 유도하고자 함
- 우리도 일부 지자체는 위생매립장에 폐기물 반입 금지를 하는 지자체가 상당 수 있어 타 지역의 폐기물이 우리시로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현재 시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민간업체 처리비용 대비 약 28%대로 저렴하여 반입수수료 (별표 5)를 인상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로 유도하고자 함 (안 제13조제3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는 지체 없이 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반함 (안 제26조제2항)

다.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 (안 제31조)

### 3. 참고사항

#### ○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폐기물관리법」 제6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라. 「국세징수법」 제7조의2

#### ○ 기타사항

(1) 논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 : 원안가결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4) 규제 심사 : 규제심사대상아님

(5)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9. 05. 13. ~ 2019. 06.03.(20일 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7) 충청남도 소관 실과 : 환경보전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체 없이” 를 “14일 이내에” 로 한다.

제31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환 경 과 장	이 한 철
	자원순환팀장	최 재 룡 (746-5531)
	담 당 자	전 현 기 (746-5534)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u>지체 없이</u>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4일 이내에</u> ----- ----- ----- -----.
제3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u>	제31조(준용규정) ----- ----- ----- <u>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b>[별표 5]</b> <b>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b> <b>(제13조제3항)</b>				<b>[별표 5]</b> <b>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b> <b>(제13조제3항)</b>			
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	기준 (kg · m³)	반입 수수료	비고	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	기준 (kg · m³)	반입 수수료	비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폐기물	10kg	<u>600원</u>	계량시 10kg (0.1m³) 미만은 절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폐기물	10kg	<u>1,200원</u>	계량시 10kg (0.1m³) 미만은 절상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10kg	<u>500원</u>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10kg	<u>1,000원</u>	
· <del>불연성(매립대상)</del> 및 가연성 (소각대상) 혼합폐기물	10kg	<u>700원</u>		· <del>불연성(매립대상)</del> 및 가연성 (소각대상) 혼합폐기물	10kg	<u>1,400원</u>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폐기물	10kg	<u>600원</u>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폐기물	10kg	<u>1,200원</u>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10kg	<u>500원</u>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10kg	<u>1,000원</u>	
· <del>불연성(매립대상)</del>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	10kg	<u>700원</u>		· <del>불연성(매립대상)</del>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	10kg	<u>1,400원</u>	
○기타 폐기물 ·F,R,P 폐기물	10kg	<u>600원</u>		○기타 폐기물 ·F,R,P 폐기물	10kg	<u>1,200원</u>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폐기물 (페스티로폼(재활용이 안 되는 것), 요소수지품, 유리섬유, 우레탄 등)	0.1m³	<u>2,300원</u>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폐기물 (페스티로폼(재활용이 안 되는 것), 요소수지품, 유리섬유, 우레탄 등)	0.1m³	<u>4,600원</u>	

[별표 5]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3조제3항)

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	기준 (kg · m³)	반입 수수료	비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	10kg 10kg 10kg	<u>1,200원</u> <u>1,000원</u> <u>1,400원</u>	계량시 10kg (0.1m³) 미만은 절상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	10kg 10kg 10kg	<u>1,200원</u> <u>1,000원</u> <u>1,400원</u>	
○기타 폐기물 ·F.R,P 폐기물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폐기물 (페스티로폼(재활용이 안 되는 것), 요소수지품, 유리섬유, 우레탄 등)	10kg 0.1 m³	<u>1,200원</u> <u>4,600원</u>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한 철

##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

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7조의2(채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납자의 인적사항 및 채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채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채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채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채납하고 채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채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